



# FTA에 맞서 양계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 FTA 토론회 통해 즉각·상시 대응 위한 TF팀 운영 필요 공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9일 안성팜랜드에서 영연방 3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FTA 관련 가금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회 오세을 회장을 비롯하여 각 단체 관계자 및 업계관계자,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축산경영과장은 “앞으로 영연방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FTA체결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정부가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가금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실화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본회 오세을 회장은 “가금발전을 위해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현재 정책금리가 일반시중금리와 큰 차이 없이 3%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



식품부 관계자는 정책금리자금이 농가현실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닭고기, 계란, 오리 분야에 대한 분임토론회가 진행되었다.

### 채란분야 토론 주요내용

#### 광역계란유통센터 필요성과 자조금 활성화 요구

채란분야는 FTA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품목이다. 하지만 향후 한중FTA가 타결될 경우에는 어느 품목 못지않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채란분야에서는 당장의 영연방 3개국 FTA에 대한 대책 보다는 장기적으로 채란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채란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광역계란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이다. 전국에서 나오는 계란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다. 농협중앙회는 정부에서 유통개선 자금으로 582억원을 생산 및 유통시설 확충에 투자할 계획을 시사하였다. 궁극적인 목적은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막고 상인들의 산란계 농장출입을 제한하여 AI 등 질병전파를 차단하면서 안정적인 계란공급을 기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광역계란유통센터시설을 확충하고 계란의 등급화 및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0년까지 현재 농협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규모(9%)를 2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본 회에서는 그 동안 GP센터가 적자로 경영되어왔던 부분을 지적하고 생산자와 유통인, 농협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해 나가는 것을 제안했으며, 유

통상인들은 정부가 유통인들에게 지원이 없었으며, 계란 탐차 등 유통시스템 확립을 위한 자금이 유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본회에서는 향후 계란유통 TF팀을 가동하여 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풀어갈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채란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자조금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AI발생 등으로 500만수가 넘는 산란계가 살처분 되다보니 노계로부터 거출하는 자조금이 조성이 지지부진하여 자조금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계수출시장도 침체되면서 가격 하락으로 노계처리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정책자금을 집행할 경우 자조금 납부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차별화를 둘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가공산업의 중요성도 요구되었다. 일본 등 가공산업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계란소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계란가공산업이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공산업에 투자와 제품개발이 이어져야 채란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수급조절을 위해 쿼터제의 필요성도 부각되었는데 6개의 종계장들이 서로 협의하여 쿼터제를 시행한다면 타 축종보다 쉽게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현재 5%를 차지하고 있는 등급판정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비, 포장비 등 생산비 상승 효과가 있는 등 문제로 인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AI로 국내 백신개발 및 접종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 청정화지위가 없어지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과 차이가 없어 수출입 장벽이 무너져 채란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이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 육계분야 주요 토론내용

### 계열사와 농가간의 신뢰회복이 선결되어야

먼저, FTA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열화사업의 올바른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모든 토론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육계산업은 계열화사업이 95%가 진행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계열화사업자는 닭고기소비가 지난해 0.9% 감소한 이후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가공마진도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에서도 계열화사업자의 과잉생산으로 농가들의 사육회전수는 줄고 있으며 사육비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따라서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닭고기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본회에서는 수입육을 억제시키고(공격적 대책) 소비시장을 늘릴 수 있

는 방안(방어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계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설개선, 백신, 질병검사의 확대 등을 통해서 종계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가의 경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분의 연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사)한국계육협회 측에서는 도계장의 전기를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변경하여 전기료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닭고기관련인증기관을 통일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무항생제, 친환경, HCAAP 인증은 내용이 70%정도 동일하므로 이를 주관하는 기관을 통합해 운영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로 AI 등으로 창고에 비축해 놓은 냉동닭을 팔 수 없는 실정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측에서는 우리 종자(PL)를 보유한 토종닭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사업과 지원사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토종닭을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계열화사업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규모 도계장을 육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외에 농협중앙회와는 별도로 계열화사업자를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의 일반 협동조합을 활성화해야 하며, 부분육 생산에 유리한 대형닭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유용했다는 것에 공감하며, 이런 협의체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상시논의가 가능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계**